

“옛 도청 당시 모습 살려 5·18 기억해야”

복원대책위가 대선후보들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은

문화전당 부속건물로 바뀌면서 고유 정체성 잃어버려
본관·별관 연결통로 다시 만들고 상황실 등 복원 촉구
5·18 상징 건물 원형복원...29일까지 입장 밝혀달라

농성 230일째를 맞는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24일 14명의 대선후보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가 내놓은 옛 전남도청 일원에 대한 복원안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도청복원대책위, 대선후보에 서한 발송=대책위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대선후보 측에 '옛전남도청 원형복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질의서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에 조성된 이유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 5·18을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옛전남도청에서는 80년 5·18의 기억과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옛전남도청(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과 그 콘텐트는 5·18을 승화시킨다며 도청 안팎을 훼손시켰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옛도청 건물과 그 일원을) 아시아문화전당의 한 예술관으로 만들면서 수백억원을 쏟아부었다”고 80년 5월 현장을 느끼기에 부족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의 뒤늦은 결정은,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죄스럽지만, 5월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옛전남도청 일원을 복원해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내놓은 복원안 살펴보니= 대책위는 이날 내놓은 복원안이 수차례

결전 회의에서 확립된 ▲5·18 최후항쟁지로서 옛 전남도청 일원은 보존해야 한다 ▲시민군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특화된 보존대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청 본관과 도청 민원실의 경우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방송실·회의공간과 식사공간, 무기고, 시민군 퇴로로 쓰인 만큼 본관과 민원실 모두 원형을 살리고 2층 연결 통로까지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공간도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살리고 80년 5·18을 재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필요할 경우 밀랍인형, 당시 상황을 표현한 사진도 곳곳에 배치한다.

도청별관은 본관과 별관을 연결한다. 금남로에서 도청건물을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내걸린 철골 구조물과 일부 건물만 남았는데 철골 구조물 부분은 본관 연결통로로 다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내부 역시 5·18 당시 모습을 살리기로 뜻이 모였다. 도청건물 뒤편 경찰청, 경찰청 민원실 건물 역시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게 바뀌었지만 각각 계엄군 첫 진입장소(야마당은 희생자 신원 확인 장소), 시민군 동선으로 쓰였던 만큼 원형을 살리자는 주장이다. 5·18 당시 신원 확인된 희생자 안치장소로 쓰였던 상무관 역시 원형을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했다.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헬기사격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보존하기로 한 상황에서 5·18의 상징과도 같은 도청건물 복원을 미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원이 이뤄진다면 총탄 흔적은 계엄군이 총을 쏘며 진입한 도청본관 후면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부속건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원형 복원을 요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방선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직 무대리는 “대책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원에는 1년가량, 예산 100~200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의견을 전당 측이 밝힌바 있으나 상황변화가 있는 만큼 구체적 언급

은 곤란하다”면서 “원형 복원 실현 가능성, 복원 기간, 예산규모를 현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힘들다. 진정성을 갖고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농성 230일...대선후보들 복원 약속에도 풀지 않는 이유는

“새 대통령 구체적 방안 제시할 때까지 계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5·18 시민군들의 항쟁지였던 옛전남도청을 원형 복원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도, 5·18희생자 가족 등이 전막농성을 이어가며 옛 도청 건물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24일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이와 관련 “유력 후보가 아닌 집권에 성

공한 대통령이 옛전남도청 건물을 옛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입장과 구체적 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하나의 예술관으로 변모한 옛 전남도청에 대해 어느 후보든 집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입장을 듣고 나서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복원 방안을 제시하기 전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정 ‘5·18최후의 항쟁지 옛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모두 광주 유세 중 ‘5·18정신을 계승한다. 옛 도청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농성장에 찾아와 5월 어머니들 손잡고 ‘제가 되면 반드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공약집에는 옛전남도청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다. 우리가 농성을 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5·18유족회 등 5·18민주유공자 3단체는 지난해 9월 7일 옛전남도청 별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도청 별관 건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가 개소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제기구 사무실이 입주하면 도청 보존과 복원은 불가능해진다”는 절박함을 안고 60~70대 5·18단체 회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후 5·18단체 회원들의 뜻에 공감한 광주·전남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옛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24일로 농성 230일을 맞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숨은 영웅” 故 안병하 전남경찰국장 가족 “경찰 명예훼손 전두환 왜 가만두나” 침묵하는 경찰에 입장 표명 촉구

고(故)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가족이 24일 “5·18 당시 발표를 거부한 아버지 그리고 (당시 전남)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을 경찰은 왜 가만두나”고 경찰 지휘부를 겨냥했다.

안 전 국장 아들 호재(57)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고 안병하 경무관을 비롯한 많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경찰 측은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초기 (안 전 국장이 지휘하는) 경찰력이 무력화되고 그로 인해 계엄군이 시위진압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남경찰국장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었다”며 “경찰국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부하들은 안 국장이 홀로 피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엄군이 출동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청에 남아있던 사람들(경찰)은 모두 피신해버렸다. 그래서 파출소가 습격당하고 무기까지 탈취당했다”고 썼다.

전 대통령령이 1980년 5월 17일까지 평화로운 민주시위를 진행한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비상계엄령 아래 군(軍)이 전권을 쥐고 경찰에 강경진압을 지시한 내용은 빼놓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소극 진압한 경찰이 결국엔 공수부대 투입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는 식으로 회고록에 쓴 것이다.

호재씨는 “당신(전두환) 때문에 가장

을 잃고 수십년간 고통을 안고 사는 유가족 가슴에 못질을 하느냐”면서 “안병하 경무관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깎아내린 전두환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지”는 입장도 내놓았다. 호재씨는 “5·18재단이 광주시와 공동 주관으로 회고록을 낸 전두환을 고소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광주시청과 우리 가족은 5·18보상금을 둘러싸고 수십년간 악연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청과는 어떤 일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족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 유족은 광주고등법원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항소심)를 제기한 상태로, 다음달 18일 선고가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 측은 5·18직후 강제퇴직 및 고문후유증 등으로 숨진 안 전 국장 측에 “순직경찰보상이 이뤄진 만큼, 이미 지급된 5·18보상금 등 1억원의 ‘중복 보상’이니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안 국장 측은 “두 보상금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5·18보상금은 아버지 고문 후유증 치료비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승진 시켜줄게” 공무원에 8000만원 가로챈 60대 구속

목포경찰청은 24일 군수에게 말해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61)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와 공모한 권모(7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2월께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접근 “군수에게 말해 승진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권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나 “군수와 잘 알고 있다. 다른 공무원을 명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있다”고 꼬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인사청탁은 해당 군수가 이를 거절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박씨를 추궁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선배 집 놀러간 50대녀, 선배남편 잠들자 지갑 ‘슬쩍’

○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의 집에 놀러간 50대 여성이 함께 어울리던 선배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지갑에 손을 댔다 경찰서행.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임모(여·54)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선배의 집에 놀러갔다가 선배의 남편인 김모

(61)씨의 지갑에서 현금 270만 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임씨는 김씨가 잠든 사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모두 훔쳐갔는데, 그 후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시도했지만 주거지에서 검거됐다”며 피해품을 전부 회수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기자 e16621@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